



“LPG경차 정책 판단자료 충분”

산자부, 빠른 시일내 매듭 의사 밝혀



대통합민주신당 우제항 의원이 LPG경차 도입여부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PG경차 설계, 개발 등에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장관은 “빠른 시간내 결정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해 국감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제항 의원은 국감질의서를 통해 수송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측면에서 LPG경차 도입이 논의됐지만 현재는 관련단체의 눈치보기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이익 지키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LP가스공업협회의 경우 에너지소비절약과 경제적 약자의 부담완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LPG경차 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석유 및 주유소협회는 에너지수급, 세수감소, 오염물질 과다배출, 폭발 위험성 등의 문제를 들어 LPG경차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및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경차 LPG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제항 의원은 LPG경차 허용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에너지 수급 및 세수감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제시됐고 오염물질 과다배출, 폭발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는 자동차업계의 의견이 이미 제출된 만큼 정책결정을 위한 판단자료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산업신문 10-17 조대인기자]